

경제 관계장관회의

25-3-3

(공개)

친환경차 ·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

2025. 1.

관계부처 합동

친환경차 ·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(요약)

I 추진 배경

<친환경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意義>

-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13.4%(40만명), 제조업 생산의 15.9%(329조원)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
 - 친환경차·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며 경제중요도 상승
 - * 최근 3년간 글로벌 시장 성장률은 전기차 65%, 배터리 73%

- (친환경차) '23년 전세계 자동차 16억대 중 3천만대가 전기차이며, 신차 1억대 중 약 1천만대 전기차 판매(신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)
 - 다만, 최근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둔화* 추세이고, 미 행정부의 IRA 철폐방침으로 GM, 포드 등은 투자 속도조절
 - * 전기차 판매 성장률: ('21) 115% → ('22) 63% → ('23) 28% → ('24.上) 10%
 - 국내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
 -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, 올해 수소차 보급도 '22년의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

- (이차전지) 이차전지 생산의 85%가 전기차向, 전기차 캐즘으로 이차전지 시장 성장세도 '21년 이후 둔화
 - *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성장률: ('21) 106% → ('22) 68% → ('23) 38%
 - 우리 기업들은 국내(4개), 해외(16개) 등 20개 배터리 공장을 운영중(전기차 800만대분)이며 신규 투자는 북미·EU 중심으로 진행중
 - 이차전지 셀·소재 기업의 영업이익 등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, 수요 둔화에 대응해 투자 속도를 조정중
 - * 배터리 양극재 기업 영업이익 : ('23.上) 3,400억원 → ('24.上) 910억원

II 경쟁력 강화 방안

기 본 방 향

- ◇ 친환경 모빌리티 주도권을 위해 친환경차·이차전지 캐즘 극복 및 배터리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
 - ①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신뢰도 제고
 - ② 첨단기술 경쟁력 확충 및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상용화
 - ③ 배터리 산업생태계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
 - ④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

1.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

< (1) 전기차 >

-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 지원 확대 및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
 -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확대(~'25년)
 - * (현행) 할인액의 20% → (개선) 500만원 초과 할인액에 대한 지원비율 40% 상향
 -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20% 추가 지원
 -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(~'27년)
 - 전기차 개소세·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중·대형 승용전기차 연비 요건 분리*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를 점진적 확대
 - * (현행) 중·대형 3.7km/kWh 이상 → (개선) 중형 4.2km/kWh 이상, 대형 3.4km/kWh 이상
-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인프라·제도 개선
 -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('25년 4,400기) 및 충전기 설치·이용 합리화*
 - * 공유재산에 설치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삭제, 2~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충전기 도입 등
 - 「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」 ('24.9월)의 속도감 있는 이행
 - * 전기차 배터리 특별 무상점검, BMS 이상징후 알람서비스 제공확대, 무인 소방로봇 등 신규 화재 진압장비 개발·보급, BMS 고도화 기술개발 등

< (2) 수소모빌리티 >

- 수소버스·충전소 안전 사각지대 해소
 -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 설치 유도('25~)
 - 전국 수소충전소(198개)에 특별안전점검(~'25.1) 및 충전소 핵심설비 KS인증품목을 확대(현 3개 → '25년 +차단밸브, 호스분리장치, 5개)
- 차고지·교통거점 등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확충(현 56개 → '27년 119개)
- '30년까지 광역버스 25%를 수소버스로 전환

2. 첨단 기술력 강화

- 자율주행, 배터리 등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('25.下)
- '27년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마련('25.上)
- 고안전·고성능·초경량 배터리 개발('24~'28, 821억원) 및 상용화 지원 지속

3.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

-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 강화
 - 대출,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('24년 5.9조원 → '25년 7.9조원)
 - 국가전략기술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기술을 추가 검토
 - 이차전지 특화단지(4개)에 전력·용수·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('25년 252억원)
- 배터리 핵심 소부장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확대
 - * '24년 5조원(이차전지 22개社 지원 대상 선정) → '25년 10조원 규모로 확대

4. 대외 불확실성 대응

- 대미 통상 대응을 위한 Fact sheet 마련 및 주지사·상하원 의원 등 우호그룹과 협력, 유사 입장국과 공조 검토
- 말련·태국 등과 FTA 협상, ODA 등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하고, 해외 완성차-국내부품기업 매칭 등 글로벌 공급망 편입지원 강화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친환경차·이차전지 산업현황	2
III. 추진 방향	4
IV. 주요 대책	5
1.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	5
2. 첨단 기술력 강화	8
3.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	9
4. 대외 불확실성 대응	10
V. 향후 추진계획	11

I. 추진 배경

□ 친환경차이차전지산업으로 전환에 따른 글로벌 주도권 경쟁 치열

* 최근 3년간('21~'23) 글로벌 시장 성장률은 전기차 65%, 배터리 73%

☞ 국내 제조업 고용의 13.4%(40만명), 생산의 15.9%(329조원) 차지
→ 당면 수요둔화 및 시장 불확실성 대응, 생태계 미래 경쟁력 강화

□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국민경제 기여도는 계속 커질 전망

- 전기차와 배터리 모두 글로벌 선두권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, 배터리 생산량의 85%가 전기차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
- 전기차 및 배터리 첨단기술은 드론, 첨단 선박, 자율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성이 크고, 하부 소부장 중소기업 생태계를 공유

□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

- 국제사회(COP28 등)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한 탄소감축 기조 유지 (수송부문은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16%)
 - * COP28('23.12) 합의문 中 "친환경차·인프라의 신속한 보급을 통한 탄소감축 가속화"
- '23년 글로벌 신차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10%로 확대되는 등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전되는 추세

□ 미국 신정부 출범, 전기차 캐즘, SDV* 등 불확실성 대응 중요

* Software Defined Vehicle, S/W를 통해 차량의 성능·편의기능, 안전사양 등 지속 업데이트

- 전기차 수요 위축, 전기차 정책변화 등에 따른 당면 리스크 및 불확실성 완화를 통해 친환경차 성장 모멘텀 유지
- 미래모빌리티의 근간이 되는 자율주행, 수소차, 이차전지 기술확보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 필요

II. 친환경차·이차전지 산업 현황

(1) 친환경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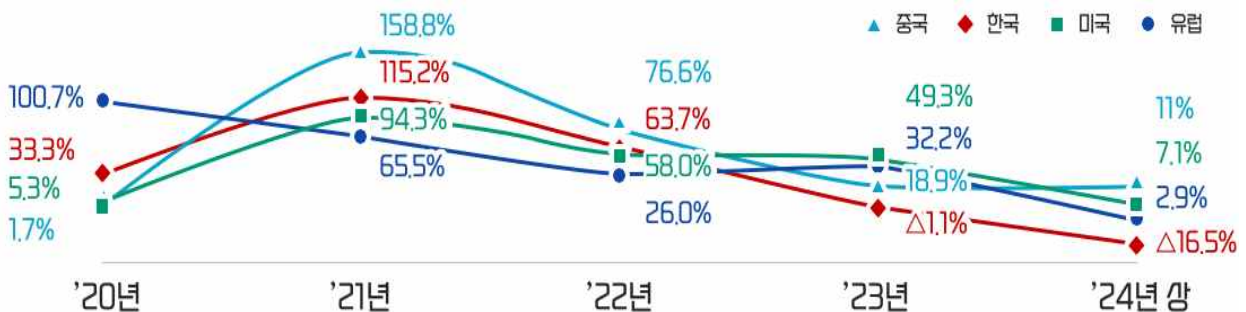
□ (세계시장) '23년 전세계 자동차 약 16억대 중 전기차는 3천만대, 신차 1억대 중 약 1천만대 전기차 판매(신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)

- 전기차 신차 판매량 비중은 중국 58%, 유럽 22%, 미국 12% 순
 - 제조사 국적별로는 중국 50%, 미국 22%, 유럽 21%, 한국* 4.3%
 - * (국내) 울산 등 7개 공장 47만대, (해외) 미국, 체코 등 5개 공장에서 5.6만대 생산

○ 다만,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'21년 정점을 지나면서 하락 추세

- 미국 신정부의 IRA 철폐방침 등으로 GM, 포드 등은 투자 속도조절
- 독일은 자국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해 구매 세액공제 부활('24.9)

<국가별 전기차 시장성장률>



□ (국내) '24년까지 전기·수소차 누적 72만대 등록(전기 68만대, 수소 4만대)

○ 국내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*

* 판매량(전년동기비) : ('22) 16.4만대(+64%), ('23) 16.2만대(△1.2%), ('24) 14.7만대(△9.7%)

- 전기차의 비싼가격, 충전 불편과 화재 불안심리 등이 성장 제약

○ 전기버스 시장잠식* 등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가 위축되고, 수소차도 '22년 1만대 → '24년 약 4천대로 보급속도 급감

* 수입산 전기버스 국내 시장점유율: ('21) 38%, ('22) 54%, ('23) 37%(1.3천대)

(2) 이차전지

□ (세계시장)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용(85%)과 ESS용(15%)으로 양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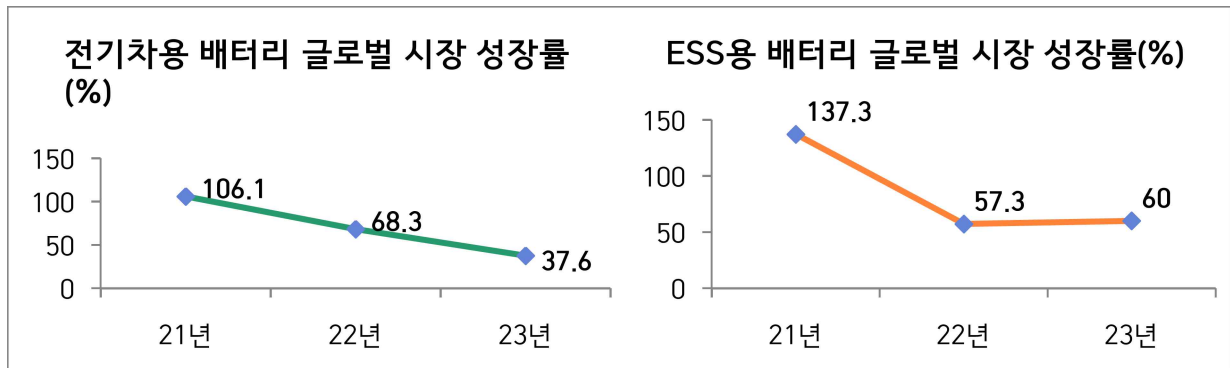
○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^{54%}, 유럽^{23%}, 미국^{14%}이 전체의 90% 차지

— 제조사 국적별 기준으로는 중국^{69%}, 우리나라^{23%}, 일본^{8%} 순

* 기업별 점유율: ①CATL 37.1%, ②BYD 15.8%, ③LG엔솔 13.6%,
④파나소닉 6.4%, ⑤SK온 4.9%, ⑥삼성SDI 4.6%

— 배터리 종류별로는 삼원계(NCM)가 62%, 인산철(LFP)이 38% 차지

○ 전기차용·ESS용 배터리 시장 모두 '21년 이후 글로벌 성장률 둔화 추세



□ (우리기업) 국내(4개), 해외(16개) 등 20개 공장운영(전기차 800만대, 525GWh)

○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투자는 북미와 EU 중심으로 진행중

* '28년 Capa : (북미) 13개 프로젝트 652GWh, (EU) 3개 프로젝트 266GWh

○ 소재기업의 경우 그간 국내 투자가 활발했으나, 최근에는 美IRA, 캐나다의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

— 다만,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소재 수요둔화와 中 대비 원가 경쟁력 열위로 업황이 악화*되어 신규 투자 시기는 조정중

* 배터리 양극재 기업 영업이익 : ('23.上) 3,400억원 → ('24.上) 910억원

IV. 추진 방향

기본 방향

◇ 친환경 모빌리티 주도권을 위해 친환경차·이차전지 캐즘 극복 및 배터리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

- ①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신뢰도 제고
- ② 첨단기술 경쟁력 확충 및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상용화
- ③ 배터리 산업생태계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
- ④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

추진 과제

	전기차	수소버스
수요 촉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전기차 보급 확대 ② 충전인프라 확충 ③ 화재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수소모빌리티 안전성 강화 ② 차고지·거점별 충전소 확충 ③ 광역·전세버스 수요 확대
기술 혁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 및 중장기 부품 기본계획 수립 ② 자율주행·車플랫폼·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 ③ 모터·배터리 제조혁신을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 	
생태계 강화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배터리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·인프라 등 확충 ② 핵심 공급망 내재화·다변화 중점 지원 ③ 공급망 재편, 환경규제 대응기반 구축 	
대외 대응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민·관 합동 아웃리치 강화 ② 수출시장 다변화 및 부품기업 수출 촉진 ③ 투자 이행을 위한 애로해소 및 밀착 관리 	

IV. 주요 대책

1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

(1) 전기차

① 전기차 보급 확대('25년 1.5조원)

- 기업 자구노력에 연동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회적 배려 지원을 확대하는 '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및 신속 집행 추진('25.1, 환경부)
 -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액에 비례하여 보조금 추가지원('25~)
 - * (현행) 할인액의 20% 추가보조금 지원
→ (개선) 500만원(보급형, 200만원) 초과 할인액에 대한 지원비율 40%로 상향
 - 청년 첫차*(20% 추가, '25.1~) 및 다자녀가구**(300만원, '24.11~) 지원 확대
 - * (현행) 차상위 이하 청년 첫차 구매시 30% → (개선) 일반 청년 첫차 구매시 20%
 - ** (현행) 보조금의 10% → (개선) 2자녀 100만원, 3자녀 200만원, 4자녀 이상 300만원
- 전기차 개소세(300만원), 취득세(140만원)를 '26년까지 감면*하고,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** 등 혜택 연장(기재·행안·국토부)
 - * 통행료 감면율 : '24년 50%, '25년 40%, '26년 30%, '27년 20%
- 배터리 소유권 분리로 전기차 구매비용 경감 추진(국토부)
 - 배터리 분리등록 실증특례를 통한 구독서비스 개시 지원('24.11~), 배터리 소유 분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('25~)
- 중·대형 승용전기차 연비기준 분리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('25.3~, 산업부)
 - * (현행) 중·대형 3.7km/kWh 이상 → (개선) 중형 4.2km/kWh 이상, 대형 3.4km/kWh 이상
- 전기차 운전면허 시험 평가기준 마련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를 점진적 확대('25~, 경찰청)
 - * '25년에 시험차량의 10% 수준으로 전기차 배치 검토

② 충전인프라 확충

- 적재적소에 충전시설 확충 및 편의성 제고(환경부, '30년까지 123만기)
 - 충전 병목지점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,400기('25, 3,758억원) 확충, 충전 사각지대* 해소를 위한 이동형 충전사업 추진
 - * △연립주택·빌라(주차공간, 수전용량 부족), △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시적 충전수요 대응
 - 충전기 점검·고장·수리 이력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관리 강화
- 충전기 설치·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공유재산(공용주차장 등)에 충전기 설치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삭제 추진(친환경차법 개정, ~'25, 산업부)
 - 친환경차 종류, 충전상태 등에 따른 충전소 이용시간* 및 수수료 기준 구체화(친환경차법령 개정, ~'25, 산업부)
 - * PHEV 충전 가능시간 축소(14 → 7시간), 충전행위 없는 충전구역 점유 제한 등
 - 대형마트, 극장 등 2~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충전기(30~50kW) 도입 촉진제도 마련(산업부)
 - * 충전시설은 급속(40kW이상, 충전 1시간), 완속(40kW미만, 충전 14시간)으로 구분,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('25.上)으로 '중속' 충전시설 기준 마련

③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('24.9월 발표)의 속도감 있는 이행

- 전기차·배터리 특별무상점검('24.8~), BMS 이상징후 알람서비스 제공 확대*('24.8~) 등 전기차 안전성 제고 대책을 지속 점검
 - * 무상 제공기간 연장(5년→10년), 구형 전기차에 통신기능 탑재 등
- 완성차사와 협력해 첨단 화재장비(관통형 방사장치) 보급(250개, '24) 및 지하 화재 진압용 무인 소방로봇 개발·보급('25~)
 - * 관통형 방사장치 : 수압을 이용해 배터리 셀을 뚫고 물을 배터리에 직접 공급
- 화재 안전성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 조기상용화 및 BMS 고도화* 기술개발에 '25년 500억원 지원 등 3년간 1,300억원 투자
 - * 센서 다변화, AI기반 화재분석 알고리즘, 무선 BMS 개발 등

(2) 수소모빌리티

- ◇ '25년 수소모빌리티 보급에 7,200억원 투입(1.3만대)
- ◇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수소 관리방안 마련('25.2)

① 수소버스 · 충전소 안전성 강화

- 수소버스 보급대수에 비례하여 권역별 정비센터 설치 유도('25~, 환경부)
* (수소버스 1대 이상) 1개소, (100대 이상) 2개소, (500대 이상) 3개소
- 전국 수소충전소(198개)에 특별안전점검 즉시 추진(~'25.1, 산업·환경부)
- 실시간 감시 의무화 대상을 기체→액화수소로 확대 및 경보체계 강화
- 수소충전소 핵심설비에 대한 KS인증품목*을 3개→5개 확대(~'25)
* (현행) 수동밸브, 체크밸브, 유량조절 밸브 → (추가) 차단밸브, 호스분리장치

② 차고지·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확충

- 대용량 충전소 확충(현 56개 → '27년 119개소) 및 이동형 충전소, on-site 제조식 충전소 등 유형 다양화(환경·국토부)
* ('25년 예산) 수소충전소 구축보조금 1,963억원, 운영보조금 164억원
* 전국 수소충전소 242개소 중 대용량 충전소(80kg/h 이상)는 56개소
- 차고지 조성('25년 147억원, 국토부)시 충전소 설치('25년 1,963억원, 환경부)사업과 연계

③ 광역 · 전세버스 중심으로 수소버스 시장수요 확대

- 고성능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('25.1~, 환경부)
* ('25년 예산) 수소차 1.3만대 7,177억원(버스 2천대 4,605억원), 스택교체 118개 41.3억원
- '30년까지 광역버스(2,600대) 25%를 수소버스로 전환(국토·환경부)
- 수소연료보조금(3,600원/kg) 상향 및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조치를 '27년까지 연장(국토·산업부)
-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및 수소버스 플랫폼 개발('24~, 산업부)

2 첨단 기술력 강화

- ◇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소부장 기술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, 배터리, 공급망 등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('25.下)
- ◇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소부장 기술개발 강화('25년 4,330억원)

1 초격차 기술 확보

- '27년 레벨4(특정구간 무인주행)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반영한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('25.上)
 - *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('21~'27, 4개 부처 88개 과제, 국비 8,320억원)
-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SDV용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(~'26)
 - * 미래모빌리티 차세대 전자아키텍처 개발('23~'26, 국비 260억원)
- 美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해 데이터보안 기술개발*·검증기반 강화**
 - *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험분석시스템개발사업(국비 280억원, '24~'28년) 등
 - ** 국내 전장품 SW 개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SBOM 도입 지원 및 가이드 제공 등
- (고안전) 전고체 배터리, (고성능) 리튬메탈 배터리, (초경량)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*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**
 - * 첨단전략산업초격차-이차전지('24~'28, 국비 821억원)
 - **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('22~'25, 국비 190억원)

2 시장경쟁력 제고

- NCM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(니켈 60%, 코발트 미사용) 미드니켈 배터리*와 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**
 - * 고전압/저가격 미드니켈(Ni≤70%) 양극재 및 적용기술 개발('24~'28, 국비 244억원)
 - ** 저가격장수명 나트륨이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 기술개발('24~'27, 국비 211억원)
- 희토 영구자석에 대한 할당관세(세율 8% → 0%) 연장('25.1~12) 및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*
 - * 희토 배제형 전기차 구동모터 핀포인트 초격차 기술개발('25~, 기획중)
- 생산단가를 20% 이상 줄이는 자이언트캐스팅 등 공정혁신 기술확보
 - * 자이언트캐스팅 개발(~'29, 200억원), 전기차 통합 차체부품 개발(~'29, 180억원) 등

3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

1 배터리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

- 기업의 자금 수요 대응 위한 정책금융(대출·보증·투자) 확대(금융위·산업부)
 - * '24년 6.0조원 → '25년 7.9조원(산은 6.8조, 기은 0.6조, 신보 0.3조, 기보 0.2조)
- 국가전략기술* 범위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 추가(기재부)
 - * 국가전략기술 선정 시 R&D·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 적용(R&D: 30~50%, 투자:15~35%)
-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전력·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
 - * '24년 192억(포항 154억, 울산 38억) → '25년 252억(포항 72억, 울산 35억, 청주 37억, 새만금 108억)
- 전기차 외 배터리 적용제품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지원
 - * 웨어러블기기용 소형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기술 개발('25~'28, 254억원)
이외 방산, UAM, 선박 등 전기차 외 배터리 수요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('26~)

2 핵심 소부장 공급망 다변화 강화

- 핵심 소재·광물 공급망 다변화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확대(기재·산업부)
 - * '24년 5조원(이차전지 22개사 지원 대상 선정) → '25년 10조원 규모로 확대
-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생산·수입다변화·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* 도입(기재·산업부)
 - * (예시) ① (국내생산)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·구매 촉진 지원
② (수입다변화) 특정국 고의존 품목의 제3국 수입시 단가차액 지원
③ (비축) 공급망 위기 발생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자금 확보('25년, 100억원)
- 적극적 국제협력(다자·양자)을 통한 핵심 광물 확보 프로젝트 지원(산업부)
 - * 포스코는 광물안보파트너십(MSP)을 통해 탄자니아의 마헨지 광산의 흑연 확보

3 EU 배터리법 등 해외규제 대응 기반 마련

- 단계별 탄소 배출량 측정, 재생원료 생산·사용 인증, 공급망 실사 대응 등을 위한 배터리 쉐주기 이력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(국토·환경·산업부)
 - * (1단계) 부처별 개별 시스템 구축('26) → (2단계)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포털 개설('27)

4 대외 불확실성 대응

- ◇ (현황) 우리기업은 미국에 자동차 138만대, 전기차 9.2만대 수출
- ◇ (리스크) 보편관세, 中공급망 배제 등 자동차 수출환경 불확실성, IRA 폐지·축소, 연비규제 완화 등 친환경차 정책 후퇴 우려

1 민·관 합동 아웃리치 강화

- ①현지 일자리 창출, ②양국간 기술협력을 통한 미래모빌리티 선도, ③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경제·안보 파트너십 강화 등 Fact sheet 마련
- 주지사·상·하원 의원 등 우호적그룹 협력, 유사 입장국과 공조 검토
 - * 국가별 對美 자동차 흑자(23년 억불) : 멕시코 803, 일본 409, 한국 290, 독일 217, 캐나다 88
- 업계의 하이브리드차, 소형전기차, 픽업 등 현지차종 다변화시 관련 협력·소통체계 가동

2 수출시장 다변화 및 부품기업 수출 촉진

- 말련·태국 등 FTA 협상 및 ODA 등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추진
 - * 전기차 수입관세 비교: (말련) 對韓 30%, 對中 5%, (태국) 對韓 40%, 對中 0%
 - * 한-인니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 개소(25년), 한-필리핀 전기차 협력센터 기획 등
- 해외완성차-국내부품기업 매칭 등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
 - * GP상담회(24년 11개국 15회 개최), 해외GP센터(마케팅, 사무공간) 10개소 운영

3 국내외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투자·규제 애로해소 지원

- 전기차 국내 신공장 등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“투자·규제 애로해소 지원단”(상의)을 통해 밀착 관리

V. 향후 추진계획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수요 기반 강화		
· '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	환경부	'25.1
·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	국토부	~'25
·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기준 분리	산업부	'25.1~
· 전기차 운전면허 평가기준 마련 및 전기차 배치 확대	경찰청	'25~
· 급속충전기 등 충전기 보급 확대	환경부	'25~
· 충전기 설치·이용 관련 제도개선	산업부	~'25
·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이행	전부처	'24~
· 수소 관리방안 마련	산업부	'25.2
·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 설치 유도	환경부	'25~
· 수소충전소 특별안전점검 시행	산업·환경부	~'25.1
·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경보체계 강화	산업부	~'25
· 수소충전소 핵심설비 KS인증 품목 확대	산업부	~'25
· 대용량 수소충전소 확충	환경·국토부	'25~
· 수소연료보조금 상향	국토부	'25~
· 수소버스 플랫폼, 상용차용 연료전지 개발	산업부	'24~
2. 첨단 기술 강화		
·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	산업부	'25.下
·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	산업부 등	~'25.6
·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	산업부	~'26
· 사이버보안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기반 강화	산업부	~'28
·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	산업부	~'28
· 희토류 저감형 모터 개발	산업부	'25~
· 공정혁신 기술개발 및 상용화	산업부	~'29
3. 생태계 강화		
· 배터리 정책금융 확대	금융위	'25~
· 국가전략기술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 추가 검토	기재부	'25~
·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	산업부	'25~
·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	기재·산업부	'25~
· 흑연 등에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	기재·산업부	'25~
· 광물 다변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지원	산업부	'24~
·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	국토·환경·산업부	~'27
4. 대외 불확실성 대응		
· 민관 합동 아웃리치 강화	산업부	'24~
· 수출시장 다변화 및 부품기업 수출 촉진 지원	산업부	'24~
· 투자·규제 애로해소 지원	산업부	'24~